

국 제 법

문 1. 국제법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가, 국제기구,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 실체가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 ㄴ. 국제기구는 그 국제기구를 설립한 국가들이 설립조약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 외에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없다.
- ㄷ. 개인은 제한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ㄹ. 국가연합의 구성국들은 국제법상의 주체성이 국가연합에 흡수되므로 국제법의 주체인 국가가 아니다.
- ㅁ. 모든 인민(peoples)은 자결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② ㄷ, ㅁ ③ ㄱ, ㄴ,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2.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른 강행규범(*jus cogens*)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노예매매, 집단살해, 테러금지, 일반적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은 강행규범으로 인정되고 있다.
- ㄴ. 조약은 체결 당시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 무효이다.
- ㄷ.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강행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ㄹ. 조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으나 그 후에 출현한 새로운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 ㅁ. 조약규정의 일부가 강행규범에 반하는 경우라도 조약의 나머지 규정은 유효하다.

- ① ㄱ, ㄷ ② ㄹ,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문 3. 국가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속지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범죄자·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속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이 자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에 대하여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수동적 속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효과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가 외국인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보편주의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이 자국의 고유한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외국인의 국적 및 행위를 불문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 4. 국제법상의 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새로 독립한 정치적 실체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기존 국가들로부터 국가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정부변경시 신정부가 그 국가의 정식의 국제적 대표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로부터 정부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 ③ 선언적 효과설에 따르면, 국가승인이 없이도 국제법상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
- ④ 반관단체는 교전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국제인도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⑤ 어떠한 정치적 실체가 영토, 국민, 정부 등 국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국으로부터 국가승인을 얻지 못하면 일반국제법상의 여하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문 5. 국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로서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자결권의 행사로 국가가 분리독립되어 새로운 국가가 성립할 수 있다.
- ③ 국가가 UN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평화애호국이어야 한다.
- ④ 국가가 아닌 실체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수 있다.
- ⑤ 영세중립국인 스위스도 UN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문 6.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UN헌장은 전쟁을 포함한 일체의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② UN헌장은 무력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자위권을 인정하면서 그 행사를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③ 무력복구는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반하므로 더 이상 합법적인 수단이 아니다.
- ④ UN헌장은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제7장에서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 ⑤ 강제조치는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가 존재한다고 UN 총회가 결정한 경우에 안전보장이사회가 취할 수 있다.

문 7. UN헌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회원국의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 ㄴ. UN헌장에는 국제연맹규약과 달리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 ㄷ. UN헌장은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을 제6장(분쟁의 평화적 해결)에서 규정하고 있다.
- ㄹ. 사무국에 등록되지 않은 조약의 당사국은 UN의 기관에 대해 그 조약을 원용할 수 없다.
- ㅁ. 정지된 회원국의 특권과 권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ㄹ, ㅁ ⑤ ㄴ, ㄹ, ㅁ

문 8. 국제사법재판소(ICJ)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안전보장이사회와 ICJ에 모두 회부된 분쟁의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분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ICJ는 그 분쟁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아니한다.
- ② 안전보장이사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의 계속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ICJ에 회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ICJ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당사자 각각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잠정조치를 제시할 수 있으며 ICJ가 제시한 잠정조치는 당사자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통지된다.
- ④ ICJ 재판관의 선거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간에 구별 없이 이루어진다.
- ⑤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도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ICJ에 요청할 수 있다.

문 9. UN 총회의 표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중요문제에 관한 총회의 표결은 재적 회원국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한다.
- ② 중요문제를 추가하기로 하는 결정에는 중요문제에 관한 표결규칙이 적용된다.
- ③ 예산문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④ 국가의 UN 가입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⑤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재적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문 10.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의 전권위임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외교공판장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ㄴ. 국제회의에 파견된 대표가 그 국제회의에서 조약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여야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ㄷ. 대한민국 국무총리는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조약의 체결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ㄹ. 법무부장관은 전권위임장을 제시하는 경우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11.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ICC 로마규정은 전쟁범죄, 침략범죄, 마약범죄 및 테러범죄를 관할범죄로 정하고 있다.
- ② ICC는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행위가 발생한 영역국 또는 그 범죄 혐의자의 국적국이 당사국이거나 ICC의 관할권을 수락하였다면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ICC는 관할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 관련 사태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하여 소추관에게 회부된 경우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특정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국가가 이를 수사하고 있더라도 그 국가가 진정으로 수사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ICC는 그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ICC의 관할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 12. 영토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무주지에 대해서는 발견만으로도 완전한 권원을 취득한다.
- ② 오늘날에도 정복은 영토 취득의 권원으로 인정된다.
- ③ 선점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영유의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④ 무주지는 가장 인접한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영유권이 인정된다.
- ⑤ 선점과 시효에 의한 영토 취득은 모두 실효적 지배를 요건으로 한다.

문 13. 영해상의 외국 선박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륙국의 선박도 타국 영해상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
- ② 외국 선박이 영해상에서 조사활동이나 측량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무해통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하고 있는 외국 선박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결과가 자국에 미치는 경우 해당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그 선박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외국 군함이 영해통항에 관한 연안국의 법령준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연안국은 그 군함에 대하여 영해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문 14.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모든 UN 회원국은 ICJ규정의 당연 당사국이다.
- ㄴ. ICJ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각자의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 ㄷ. 권고적 의견 부여 절차와 달리 쟁송사건에서는 국가만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ㄹ. UN 전문기구는 어떤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 ㅁ. 사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성질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송에 참가한 국가는 ICJ의 판결에 구속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5.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기구의 설립문서가 되는 조약이나 국제기구 내에서 채택되는 조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국가 간의 조약에 적용된다.
- ③ 국가승계, 국가책임, 국가 간의 적대행위의 발발로부터 조약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단하지 아니한다.
- ④ 원칙적으로 이 협약 발효 후 당사국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서 적용된다.
- ⑤ 서면의 형식으로 된 조약에 적용된다.

문 16.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UN헌장 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원국이 총회의 주의를 환기한 분쟁에 대하여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총회는 어떠한 토의도 하지 아니한다.
- ②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자국이 당사자인 분쟁에 관하여 헌장에 규정된 평화적 해결 의무를 미리 수락하는 경우 그 분쟁에 관하여 총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
- ③ 회원국이 아닌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심의 중인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이 분쟁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토의에 투표권 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
- ④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국제분쟁의 어떠한 단계에서도 적절한 조정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안전보장이사회가 법적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도록 권고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분쟁의 당사자인 이사국은 투표를 기권한다.

문 17.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판관이 소송당사자의 국민인 경우 동 재판관은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ㄴ. 판결에는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의 성명이 포함되지 않는다.
 ㄷ. 재판관은 9년의 임기로 선출되며 재선될 수 있다.
 ㄹ. 재판관은 이전에 그가 변호인으로 관여하였던 사건의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
 ㅁ.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문 18. 국제적 분쟁의 해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상적으로 교섭은 제3자가 개입하는 다른 분쟁해결 방법이 사용되기 전에 분쟁해결의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이 사용된다.
- ② 1982년 UN해양법협약은 분쟁해결 방법으로 교섭을 규정하고 있다.
- ③ UN헌장은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사실심사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중개는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분쟁당사국들의 교섭에 적극 참여하여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 ⑤ 조정은 제3자가 분쟁당사국들의 동의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당사국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결책을 제시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문 19.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ICJ 판례에 의함)

- ① UN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ICJ규정 당사국이 될 수 있다.
- ② UN 총회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ICJ 재판관 후보자는 당선된 것으로 본다.
- ③ ICJ 절차에서 임시재판관(*ad hoc* Judge)의 지명은 쟁송사건의 소재판부에서도 인정된다.
- ④ ICJ규정에 따른 잠정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⑤ ICJ는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사안이 특정 국가와 관련되는 사안에서 해당 국가의 동의가 없는 데도 권고적 의견을 부여하였다.

문 20.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소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 분쟁해결제도의 상소절차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 ②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상설기구이고, 그 위원은 4년 임기이며 연임이 불가하다.
- ③ 원칙적으로 분쟁당사자가 상소 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자신의 보고서를 배포하는 날까지의 절차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분쟁당사자인 회원국의 상소기구위원도 해당 분쟁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 ⑤ 상소기구는 패널의 법적 해석이나 결론을 확정, 변경 또는 파기할 수 있으며, 상소기구의 심의과정과 개별 위원들의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문 21. GATT의 내국민대우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내국민대우 의무는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ㄴ. 내국민대우원칙에 따르면, 수입품에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ㄷ. 내국민대우원칙은 수입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수입상품과 국내상품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ㄹ. 회원국은 수입품에 대하여 동종의 국내상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내국세를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문 22.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개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WTO의 모든 회원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만 발효하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1994년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 ② 1994년 GATT 제2조 관세양허
- ③ 1994년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 ④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조 제1항 최혜국대우
- ⑤ WTO설립협정 제9조 의사결정

문 23. <보기1>의 사실관계에 기초한 <보기2>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A국은 B, C, D, E국으로부터 각각 자동차를 수입하고 있다. A국은 B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40%, C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 D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30%, E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A, B, C, D국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며 E국은 WTO 회원국이 아니다. 또한 교역되는 자동차는 모두 동종상품(like product)이라 가정한다.]

<보기2>

ㄱ. A국은 현재 WTO의 최혜국대우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며, 동 원칙이 적용될 경우 B, C, D, E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모두 10%가 된다.

ㄴ. 만약 A국과 B국이 자동차의 무관세를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면, E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모두 무관세가 된다.

ㄷ. A국은 E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일괄적으로 5%로 감축할 수 있다.

ㄹ. A국이 D국과의 자동차 교역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에 관한 의무면제(waiver)를 받았더라도, A국은 B국과 C국산 자동차에는 10% 관세를, E국산 자동차에는 2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4.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양해(DSU)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DSU는 WTO 협정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비위반제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② DSU는 분쟁해결 방법으로 패널 및 상소절차뿐만 아니라 주선, 조정, 중개, 중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③ DSU에 따르면 패널의 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DSU에 따르면 DSU 자체는 분쟁해결 대상 협정에 속하지 않는다.
⑤ 패널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5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문 25.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해석과 협정들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간에 저축이 있을 경우 WTO설립협정이 우선한다.
②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③ 1994년 GATT의 내용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이 저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④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WTO설립협정과 다자간 상품무역협정의 해석을 채택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는다.
⑤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의 해석에 대한 채택은 총의(consensus)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동법

문 1. 근로3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근로3권은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ㄷ.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ㄹ.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문 2. 노동법의 법원(法源) 및 자치규범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②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근로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문 3. 사용자 개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② 사업의 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의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③ 부당노동행위인 단체교섭거부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⑤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실제의 경영자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